

광주, '車·에너지·문화' 3대 벨리 반영 전남,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포함

광주·전남 공약 어떻게 이나

상생 공약 3건 등 19건 선정
예산 반영·실질 진행 이뤄지게
지자체와 정치권 힘 모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공약 각각 8건 그리고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생공약은 ▲5·18 정신의 현저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벨리 국가에너지산업 거점화 추진(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 3건이다.

시와 도는 이번엔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핵심공약들이 예산 지원을 거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토록 계획이다.

◇광주시 현안 사업 대부분 포함=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광주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채택된 사업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등 8건이다.

광주가 민선 6기 들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산업, 문화 등 3대 벨리가 모두 반영되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기업 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보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기반이 마련됐고, 광주 도심팽창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도심공동화 현상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8건의 공약을 세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으로 나누면 광주는 19건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빛가람혁신도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벨리 국가에너지산업 거점화 추진 국정과제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직류(DC)기반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 ▲빛가람혁신도시 교통·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등의 세부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19건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를 모았던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내륙철도 건설도 사업 추진의 명분과 근거가 생겼다.

또 ▲한국문화기술(KT)연구원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 빠졌다. 광주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KT연구원은 법 개정 문제를 풀어나가고, 민주·인권기념파크는 명분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포함=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등 전남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19일 전남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

개호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요구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2번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소재산업 육성'은 국정과제 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반영,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따라 여수·순천·보성·광양, 광주·목포·담양·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전남북 상생 발전 사업으로 담양·장성·정읍 등 전남북 6개 시군을 연계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도 조성된다.

또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서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발전 비전 및 공약으로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 시책 등을 검토,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연다. 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 다음달 25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대응능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요직에 임명된 전남 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검·경 수사권 분리 연내 시행

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 쏠림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 개혁 등을 이워야 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정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엔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고,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진실과 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등을 추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정의로운 나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개혁을 비롯한 정치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거론됐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으로 잠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배치됐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3개월간 30만원의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금융운용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누리고 정은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임기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폐지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국세-지방세 7:3 → 6:4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전략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제2국무회의의 시범 운영 후 제도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로 개선 ▲국립대 총장후보 사전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과 위상 강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구축을 위해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부과제로 ▲군지역 100원 택시 도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위 설치 추진 ▲휴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대'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